



## 해외\*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 포함<sup>1)</sup>

- 2024년 3월 초,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본 개정안은 마크롱 정부가 헌법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일 열린 특별 합동회의에서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최종 통과되었다. 프랑스의 헌법 개정에는 상·하원 합동 회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512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프랑스 헌법(제5공화국 헌법) 제34조에 개인이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 그리고 세계 여성의 날, 프랑스 사법부 장관 에릭 듀퐁-모레티(Eric Dupond-Moretti)가 수정된 헌법을 인장하고 봉인하는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수정된 헌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마련된 공식 석상을 통해 "오늘 기념식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더불어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시민 및 거주민의 정치·경제·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헌장이다. 헌장 개정은 회원국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촉구한 위 개정을 실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유럽 내 많은 국가들이 임신중지를 합법화한 반면, 여전히 여러 규제를 적용하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임신중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 사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이미 임신중지를 합법화하였다. 1975년 제정된 법에서는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임신 10주까지 임신중지를 허용했고, 이후 2001년에는 임신 12주, 2022년에는 임신 14주까지로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미성년자도 부모의 허락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임신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은 국가 건강보험에서 부담했다.

- 프랑스 의회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이미 임신중지 권리가 합법인 데 굳이 헌법에까지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그러나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프랑스 현행법상 임신중지가 합법인데도 프랑스 정부가 헌법을 수정하고자 한 데는 미국의 최근 사례가 주요한 정치적 동기로 작용했다.
-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 권리를 인정했던 1973년 ‘로 앤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임신중지가 금지되거나 상당 수준 제한되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다. 실제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인 2022년 6월 9일, 찬성 324표, 반대 155표, 기권 38표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유럽 내에서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는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임신중지가 가능하더라도 향후 극우 정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 제도적으로 임신중지 권리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편이었다. 2022년 11월 프랑스 여론조사기관 IFOP가 프랑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명시하는 데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사실 통과되기까지는 상·하원 간 개헌안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었다. 이후 마크롱 정부가 개헌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서야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으며, 마침내 특별회의까지 통과하면서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 투표에서는 프랑스 내 극우 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 의원과 많은 보수성향의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프랑스에서 헌법에 임신중지 권리를 포함하게 된 것은 분명 제도적으로 진일보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촉구한 것처럼, 유럽연합 차원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개인의 기본 인권으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하게 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극우정당 출신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이끄는 현 이탈리아 정부는 임신중지 권리를 확대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포함한 만큼, 앞으로 유럽연합에서 해당 주제로 담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지켜볼 만하다.

• 참고문헌 •

- DW(2024.03.04) "Why France enshrined abortion rights in its constitution", <https://www.dw.com/en/why-france-enshrined-abortion-rights-in-its-constitution/a-68436705> (접속일: 2024.03.23.).
- European Parliament(2022.07.07), "Include the right to abortion in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demand MEPs",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20701IPR34349/include-the-right-to-abortion-in-eu-charter-of-fundamental-rights-demand-meps> (접속일: 2024.03.23.).
- France 24(2024.03.04) "France enshrines abor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historic vote",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40304-france-to-enshrine-abortion-rights-in-country-s-constitution> (접속일: 2024.03.23.).
- France 24(2024.03.08) "France seals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on International Women's Day",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40308-france-s-macron-to-seal-abortion-becoming-constitutional-right> (접속일: 2024.03.23.).

## 스코틀랜드, 임신중지와 재생산권리 관련 안전 접근 구역 법안 (Safe Access Zones Bill)<sup>2)</sup>

- 2024년 3월 24일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퀸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Queen Elizabeth University Hospital) 앞에서 이루어진,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생명을 위한 40일(40 Days for Life)' 시위의 마지막 날이었다. 해당 시위는 주로 미국 텍사스에서 온 사람들 100여 명이 모여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침묵 기도'를 40일간 진행하는 형식으로 다년간 글래스고(Glasgow)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들을 저지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시위를 두고, 스코틀랜드 전역에서는 임신중지를 위해 병원을 찾는 여성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으며,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2022년부터 추진하던 '안전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이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해당 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 개요

-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Safe Access Zones Bill)'은 공식적으로 '임신중지 서비스 안전 접근 법안(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Bill)'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5월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에 의해 발의되었다. 안전 접근 구역 법안은 의료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생명을 위한 40일'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으로부터 병원을 찾은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으로,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중지 반대 활동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스코틀랜드에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주변 반경 150미터에 걸쳐 안전한 접근 구역을 설정하여 임신중지 반대시위와 같은 특정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환자와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 정신적·신체적으로 안전한

2)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게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2022년 5월 법안 발의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지지를 얻었으나, 현재까지도 법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신속한 법안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 ■ 법안을 둘러싼 쟁점

- 스코틀랜드에서는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스코틀랜드는 물러서라(Back Off Scotland)'와 같은 옹호 단체는 해당 법안이 임신중지를 장려하여 새로 태어날 생명을 해칠 것을 우려하며 법안 진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반면 이 단체와 입장이 같은 텍사스 기반의 임신중지 반대단체의 '생명을 위한 40일' 시위와 같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설 근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이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재생산 권리 지지자들과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켄 엘리자베스 대학 병원의 컨설턴트인 그렉 이윈 박사(Dr. Gren Irwin)는 이러한 시위자들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비난하고 임신중지 반대 활동이 환자와 직원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강조하며, "이 시위들로 인해 조성된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라픽 플래카드의 존재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괴롭힘"이라고 표현했다.
- 해당 법안의 주요 쟁점은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는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는 것이다. 의료 전문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인권 단체들은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는 개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임신중지시설 근방에 완충지대(Buffer Zone)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단순한 입법 문제가 아니라 공중 보건과 안전에 대한 긴급한 사안이며, 의료 접근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북아일랜드에서 이루어진 유사한 입법 조치가 실제로 임신중지를 위해 의료시설에 방문한 여성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보건의료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험자 유사프(Humza Yousaf) 장관과 길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스코틀랜드 녹색당 의원은 임신중지 반대 시위로부터 의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접근 구역을 만드는 입법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다수의 보건의료 전문가들도 이러한 임신중지 반대시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의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니카 레논(Monica Lennon) 노동당 의원도 스코틀랜드 정부에 신속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합류했으며, 입법 지연이 임신중지 시설을 찾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대응으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 절차를 몇 개월 내에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발의한 '안전한 접근 구역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의 입장이 있지만, 의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 입법 절차가 정부 발표 내용처럼 몇 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스코틀랜드에서 재생산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활동으로부터 여성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 Law Society of Scotland(2023.12.), "Abortion Services (Safe Access Zones) (Scotland) Bill", <https://www.lawscot.org.uk/media/1hjhojsjg/23-12-20-hea-equ-crim-chr-abortion-services-safe-access-zones-s-bill-written-evidence.pdf> (접속일: 2024.03.25.).
- BBC. (2023.06.15.), "Abortion clinic 'buffer zone' bill lodged in Scottish Parliament", <https://www.bbc.co.uk/news/uk-scotland-65914694>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3.25.), "Anti-abortion protestors accused of repeated harassment as 100 gather outside Scots hospital",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anti-abortion-protestors-accused-repeated-32433957> (접속일: 2024.03.25.).
- Daily Record(2023.09.21.), "Doctor backs urgent call for buffer zones at Scots abortion clinics as protesters to target hospitals", <https://www.dailyrecord.co.uk/news/scottish-news/doctor-backs-urgent-call-buffer-30996387> (접속일: 2024.03.25.).
- 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2024.), "Safe Access Zones Scotland - our campaign to introduce safe access zones in Scotland", <https://bpas-campaigns.org/campaigns/safe-access-zones-scotland/> (접속일: 2024.03.25.).

## 호주 퀸즐랜드주,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권한 확대<sup>3)</sup>

-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주는 2024년 3월 중순 무렵 새로운 '경찰 효율성 법(Policy Efficiency Laws)'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에 별도의 신청없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즉시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와 관련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간 호주에서는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불충분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 보호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 호주 내 가정폭력 문제는 '국가 위기(National Crisis)'라고 명명될 만큼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퀸즐랜드주의 경우, 경찰 출동 신고의 40%(2021년 기준)가 가정폭력 사건이며, 2019년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위반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에서는 가정폭력 집중 단속 기간(Operation Amarok V, 2024년 2월 시행)에 590명이 중대한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었고, 1,183건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만큼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 호주 각 주(State)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 주별 관련법에 따라 경찰의 대응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빅토리아(Victoria)주의 경우,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에 도착하여 임시보호조치(Family violence safety notice)를 발부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발부 이후 14일 이내 법원에 출두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명령(Family Violence Intervention Order)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구속 및 기소 조치를 한다.

3) 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경찰이 가정폭력 가처분 명령(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s)을 통해 가해자에게 임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본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가해자의 폭력을 제지한다. 임시 구금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할 수 있다.
- 남호주(South Australia)주에서는 경찰 혹은 법원이 임시 개입 명령(Interim Intervention Order)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지고, 추후 가정폭력법원(Specialist Family Violence Court)에서 진술 청취 후 정식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 이와 같은 절차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연방법원에서는 국가 가정폭력 명령 체계(The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s Scheme; NDVOS)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7년 11월 25일 이후 발급된 가정폭력 명령(Domestic Violence Orders)은 거주지 외 타 주 및 준주(territory)에서도 적용 가능하여 피해자가 동일한 사후 조치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이전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는 지방 법원을 통한 별도의 신청으로 적용 가능하다. 가정폭력이 최초 발생한 지역 내 법원일 필요는 없다.
- 호주 내 각 주별 가정폭력 관련 법안의 내용,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초기 대응 범위가 상이하고,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인 경우에도 여전히 경찰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개입 방안과 역할은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ABC News (2022.04.14). "NSW Police officers convicted of domestic violence have kept their jobs, despite the force's claims of 'zero tolerance'". [https://www.abc.net.au/news/2022-04-14/nsw-police-officers-convicted-domestic-violence-kept-jobs/100982038?utm\\_campaign=abc\\_news\\_web&utm\\_content=link&utm\\_medium=content\\_shared&utm\\_source=abc\\_news\\_web](https://www.abc.net.au/news/2022-04-14/nsw-police-officers-convicted-domestic-violence-kept-jobs/100982038?utm_campaign=abc_news_web&utm_content=link&utm_medium=content_shared&utm_source=abc_news_web) (접속일: 2024.03.16.).
- Australian federal government (2024.03.01). "National Domestic Violence Order Scheme", <https://www.ag.gov.au/families-and-marriage/families/family-violence/national-domestic-violence-order-scheme> (접속일: 2024.03.17).
- State government of Queensland (2024.02.01)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rotection Act 2012", <https://www.legislation.qld.gov.au/view/pdf/inforce/current/act-2012-005> (접속일: 2024.03.16.).
- The Guardian (2024.03.01.) "Queensland police to be granted power to instantly issue year-long domestic violence protection orders",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4/feb/29/queensland-police-domestic-violence-laws-new-efficiency>) (접속일: 2024.03.06.).
- 9News(2024.02.12) "Almost 600 people charged with domestic violence offences in four days in NSW", <https://www.9news.com.au/national/new-south-wales-news-police-arrest-almost-600-in-domestic-violence-blitz/1710470b-804b-40a8-91c7-0003d489bcca> (접속일: 2024.03.06.).



## 오스트리아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 개정<sup>4)</sup>

- 2023년 9월, 오스트리아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관련 제도를 일부 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하여 2019년 8월 1일자로 발효된 부모 및 돌봄제공자의 일·가정양립에 관한 지침(2019/115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을 오스트리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행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 유럽연합(EU)이 채택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침은 육아휴직 기간을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돌봄에 참여하고, 여성이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보다 우호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지침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국내법을 수정할 의무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여러 회원국들이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수정해 왔다.
- 오스트리아에서 개정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parental leave, *Elternkarenz*) 사용 기간과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총 24개월이다. 부모는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부모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두 번 사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소 사용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주어진 총 24개월은 양쪽 부모가 각자 최소 두 달씩 사용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부모 한쪽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은 22개월이 된다. 한부모가정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학생, 자영업자이거나 미고용 상태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한 명이 24개월을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작년 하반기 법 개정 이전부터 자녀 출산 후 돌봄으로 인한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 전환이 가능했다. 2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3년 연속 일한 근로자라면 성별 상관없이 해당 제도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부모 양측 모두 동시에 시간제 근무 전환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인 근로자는 자녀가 만 7세까지 시간제 근무 전환이 가능했는데, 만 8세로 사용기한이 확대되었다.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별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즉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일은 계속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시간도 낼 수 있다.
- 고용주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그리고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 후 4주까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전일제, 시간제 고용 형태나 성별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셈이다. 즉,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보장받는 기간(protection period, *Kündigungsschutz*)이다. 이러한 보호기간은 출산 시에도 적용되는데, 여성 근로자는 임신 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 후 4개월간 근로자로서 보호기간을 적용받는다.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4)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보호기간 역시 그대로 유효하며 연장된다. 법적으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받으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연기를 거부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공식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서면으로 반드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 자녀돌봄수당(childcare allowance, *Kinderbetreuungsgeldes*)은 부모 양측 모두 받을 경우 자녀 출생 이후 456일에서 1,063일까지 기간 내에 유연하게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든다. 단기 수령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일 35.85유로(한화 약 5만 3천 원)에서 2024년 일 39.33유로(한화 약 5만 7천 원)로 소폭 상승했다. 이 밖에도 소득에 기반하는 자녀돌봄수당도 있는데, 이는 가구 소득 상한선, 자녀 출생 전 최소 고용기간 182일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그리고 남성 근로자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는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family-time bonus, *Familienzeitbonus*)이 확대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일 23.91유로(한화 약 3만 5천 원)이었던 반면, 2024년 수당은 52.46유로(한화 약 7만 7천 원)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은 자녀 출산 후 91일 내에 사용할 수 있고, 최소 28일에서 최대 31일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 또 주목할 부분은 평등대우법(Equal Treatment Act, *Gleichbehandlungsgesetz*)에 육아휴직이 새로운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간제 육아휴직 사용, 돌봄 휴직 또는 기타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휴가를 쓸 때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적용 및 이행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돌봄 행위 자체를 보호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규범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육아휴직 외에도 근로자는 1년에 보통 1주일(근로자 본인의 최대 주당 근로시간), 가족구성원이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 돌봄 휴가(care leave, *Pflegefreistellung*)도 사용할 수 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이 그 대상이며, 배우자 역시 포함될 수 있다.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경우 형제, 자매, 삼촌이나 이모 등 세대원 누구나 그 돌봄 대상으로 포함된다. 12세 이하 자녀가 계속 아픈 경우, 추가로 1주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직계 가족만 돌봄 휴직 대상으로 인정되었고, 동일 세대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제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층 확대되었다.
- 오스트리아에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과 관련된 제도가 일부 개정되면서, 근로자가 일과 돌봄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층 개선되었다. 특히 휴직 기간이나 남성 근로자의 가족돌봄시간 보너스 수당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모 양측 모두 돌봄에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 참고문헌 •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Economy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공식웹사이트), “Elternkarenz,” <https://www.bmaw.gv.at/Themen/Arbeitsrecht/Karenz-und-Teilzeit/Elternkarenz.html> (접속일: 2024.04.21.)
-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Economy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공식 웹사이트), “Parental Part-Time Work),” <https://www.bmaw.gv.at/en/Topics/Labour-Law/Unpaid-Leave-and-Part-Time-Work/Parental-Part-Time-Work.html> (접속일: 2024.04.21.)
-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오스트리아 공공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 “Familien - zeit - bonus (Family time bonus),” <https://www.gesundheitskasse.at/cdscontent/?contentid=10007.879676&portal=oegkportal> (접속일: 2024.04.21.)
- Österreichische Gesundheitskasse (오스트리아 공공건강보험 공식 웹사이트), “Kinderbetreuungsgeldes (Childcare allowance),” <https://www.gesundheitskasse.at/cdscontent/?contentid=10007.879639&portal=oegkportal> (접속일: 2024.04.21.)

## 영국, 양육자 고용권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변경<sup>5)</sup>

- 영국은 2023년부터 양육자/돌봄책임자의 고용권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고 일부는 202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양육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직장 스트레스를 줄이며, 결국 높은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은 여성의 경제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지 않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여성이 양육에 전념하느라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임신을 앞둔 여성이나 임신 중인 여성이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러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 개정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성별 임금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본론에서는 양육자 고용권(Parenthood related Employment Rights)에 관련한 영국의 주요 법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유연 근무권 강화(Enhanced Flexible Working Rights) 관련 법 시행
  - 기존에 영국에서는 피고용인의 고용기간이 26주(약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었으며, 12개월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인은 유연한 근무 형태가 향후 고용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했으며, 고용주는 신청인의 요청에 3개월 내에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 2024년 4월 6일부터 모든 피고용인은 근무 첫날부터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12개월 내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도록 횟수가 증가했다. 이는 고용되기 전이나 직후부터 양육의 의무를 가지게 된 피고용인의 고용권을 강화하고, 양육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는 양육 환경과 책임에 맞춰 근무시간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요청의 기대효과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없어 유연근무 신청에 대한 장벽을 완화한다. 고용주의

5)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경우 기존에 비해 한 달 단축된 2개월 내에 이들의 요청에 응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겨서, 양육자가 양육 필요에 따라 빠르게 근무시간의 조정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유연 근무권 강화 관련 법안은 가정 내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이 직장을 관두지 않고, 육아를 위한 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한 명의 양육자만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근무를 신청함으로써 가정 내 육아를 균형 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여성이 육아로 인해 경력을 단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연한 남성의 육아휴직(Flexible Paternity Leave Options)을 위한 법 개정
  - 2024년 3월 8일부터 남성의 육아휴직법도 변경되었다. 기존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2주 연속으로 낼 수 있고, 아이가 출생 또는 입양된 후 8주 안에만 육아휴직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변경된 후에는 1주씩 휴가를 두 번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의 출생/입양 후 8주 내에서 52주 내로 확대되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4월 6일 이후 출생 예정인 자녀나 입양될 아이에게 적용된다. 이전에는 출생 또는 입양 예정일 15주 전까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법안 변경 후에는 28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변경된 법안은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유연성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변경에는 육아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며, 출생이나 입양 예정일까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육아휴직 신청기한을 출생/입양 예정일 28일 전까지 늦춰, 남성이 가정 내의 육아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신생아 치료 유급 휴가(Paid Neonatal Care Leave)법 시행 예정
  - 스투어트 맥도날드(Stuart C. McDonald) 의원에 의해 발의된 신생아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법(The Neonatal Care(Leave and Pay) Act)이 2023년 5월 24일부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해당 법은 출생 후 첫 28일 동안 7일 이상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의 양육자에게 최대 12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유연 근무제와 같이 출근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법은 신생아의 건강 문제로 인한 양육자의 경제적·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을 돌보면서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생아 치료 유급 휴가는 육아 휴직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해당 법은 자선 단체인 블리스(Bliss)에서 2019년 영국에 있는 700명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료받아야 하는 신생아 양육자의 90%가 육아휴직 기간이 신생아가 치료받는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고 대답했다. 또한 많은 수의 양육자들이 신생아가 치료를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에 복귀해야 했으며, 아이가 너무 어려서 보육원에도 맡길 수 없기에 양육자 중 한 명이 직장을 관두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미 5명 중 2명의 양육자가 신생아 치료 문제로 인해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지속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양육자가 직장을 관두는

경우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정부의 목적대로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둔 양육자의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신과 육아기간 정리해고 보호법(The Protection from Redundancy(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 시행
  - 평등과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9명 중 1명의 여성이 출산 후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차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한다. 댄 자비스(Dan Jarvis) 의원은 이러한 차별적 관행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 24일 임신과 육아기간의 정리해고 보호법(The Protection from Redundancy(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양육자가 임신 기간 전체와 출산/입양 후 18개월까지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며, 202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 해당 법은 임신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 여성이 경험하는 고용 불안을 완화하여, 개인과 가족의 안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거나 경력 단절을 마주해야 하는 많은 여성에게 보호체계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해당 법으로 인해 고용주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 GOV UK, "Flexible Working", <https://www.gov.uk/flexible-working/applying-for-flexible-working> (접속일: 2024.04.15.)
- Startups (2023.12.13.), "Flexible Working Bill: how to respond to a flexible working request", <https://startups.co.uk/people/management/flexible-working-bill/> (접속일: 2024.04.15.)
- People Management. (2024.01.02.), "New flexible working laws: an employer's guide", <https://www.peoplemanagement.co.uk/article/1856168/new-flexible-working-laws-employers-guide> (접속일: 2024.04.15.)
- GOV UK (2023.05.23.), "Workers' rights wins for parents and carers",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kers-rights-wins-for-parents-and-carers> (접속일: 2024.04.15.)
- Harper James (2024.03.27.), "Changes to Statutory Paternity Leave", <https://harperjames.co.uk/article/changes-to-statutory-paternity-leave/> (접속일: 2024.04.16.)
- UK Parliament (House of Lords) (2023.03.14.), "Neonatal Care (Leave and Pay) Bill",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LLN-2023-0018/2023-0018-Neonatal-Care-\(Leave-and-Pay\)-Bill-Largefont.pdf](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LLN-2023-0018/2023-0018-Neonatal-Care-(Leave-and-Pay)-Bill-Largefont.pdf) (접속일: 2024.04.16.)
- Legislation GOV UK (2023.05.24.), "Protection from Redundancy (Pregnancy and Family Leave) Act 202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17/enacted> (접속일: 2024.04.16.)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2016), "Pregnancy and Maternity-Related Discrimination and Disadvantage: Experience of Mothers", [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sites/default/files/mothers\\_report\\_-\\_bis-16-146-pregnancy-and-maternity-related-discrimination-and-disadvantage-experiences-of-mothers\\_1.pdf](https://www.equalityhumanrights.com/sites/default/files/mothers_report_-_bis-16-146-pregnancy-and-maternity-related-discrimination-and-disadvantage-experiences-of-mothers_1.pdf) (접속일: 2024.04.16.)

## 호주, ‘여성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한 2024-2025 예산안 발표<sup>6)</sup>

- 호주 정부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위기(national crisis)라고 명명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지원과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제기해 온 바 있다. 특히 최근 호주 전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4일에 1명 꼴로 여성들이 희생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 2024년 4월 28일 현 호주 연방정부의 안토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수도 캔버라에서 개최된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 주최측은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여 통과시킬 것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가적 긴급사태(National emergency)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알바니즈 총리는 긴급 선언은 산불 등 자연재해에 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적 위기로 다루어져야 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알바니즈 총리는 이 문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부 차원의 노력보다는 호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 알바니즈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젠더폭력 관련 기관의 관계자 및 여당 등에서는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 대응을 위해 이미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 이후 비판 여론이 계속되자, 2024년 5월 14일 호주 연방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케이티 갤러거(Katy Gallagher) 장관(재정부, 여성부 장관 겸임) 또한 이 예산의 가장 큰 사용 목적은 여성의 안전(women’s safety)이라고 강조하였다.
- 연방정부는 정부 예산서에 “The Women’s Budget Statement”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젠더폭력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과 시행을 위한 직·간접 예산을 약 2조 65억 원가량 투입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책정하였다.
  - 향후 5년간 젠더폭력 관련 프로그램(The Leaving Violence Program) 지원(한화 약 925억 원)(2025년 7월부터 시행)
  - 호주 국립 여성 안전 연구 기구(ANROWS)의 증거 기반 연구(evidence-based research) 지원(한화 약 38억 원)
  - 여성부 내 여성 안전 자원 확보 및 활동 지원(한화 약 350억 원)
  - 가정,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유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 사업비 및 긴급 숙소 지원(한화 약 53억 원)
  -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학 교육 과정 지원(한화 약 17억 원)

6) 조혜인, 모내시대학교(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가정폭력 피해자(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 등의 비자 소지자) 대상 긴급 지원(한화 약 60억 원)
- 향후 4년간 강제 결혼(forced marriage)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스피크 나우(Speak Now)’ 지원 (한화 2.2억 원)
- 호주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해결이 주요 국정과제로 언급됨은 환영하고 있으나, “The Women’s Budget Statement”의 내용이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해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신규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 특히 기존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등의 경우 신규 예산이 배정되기는 했지만, 동일 프로그램의 연장선에 있으며 여전히 소액 지원(약 5,000호주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또 다른 한계로 나타나는 점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으면 주 부양자로부터 입은 젠더폭력 피해에 대해 가정폭력 전문 서비스 기관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 혹은 국가장애 보험계획(NDIS)과 같은 일반 서비스 기관 혹은 장애 사회보장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피해 지원 절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2024-2025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2024년 5월에 발표되었으므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2024년 7월을 기점으로, 예산의 집행 내역과 이와 관련한 정책 실효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ABC News (2024.04.28.), “Anthony Albanese tells rally gendered violence is ‘a problem of our entire society’”. <https://www.abc.net.au/news/2024-04-28/pm-addresses-domestic-violence-rally/103777324> (접속일: 2024.04.29.)
- ABC News (2024.05.13.), “One of the budget papers will be all about women. Here’s what you need to know”. <https://www.abc.net.au/news/2024-05-13/womens-budget-statement-explained/103839216> (접속일: 2024.05.13.)
- Australian government (2024.05.14.), Women’s Budget Statement. <https://budget.gov.au/content/womens-statement/download/womens-budget-statement-2024-25.pdf> (접속일: 2024.05.14.)
- Australian government (2024.05.14.), Cost of living help and a future made in Australia. <https://budget.gov.au/content/overview/download/budget-overview-final.pdf> (접속일: 2024.05.13)

## 프랑스, ‘비동의 강간죄’ 관련 제도적 논쟁<sup>7)</sup>

- 프랑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을 ‘폭력, 강압, 위협, 급습과 같은 방식으로 타인에 의해 성관계를 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합의 여부는 법적으로 정의하는 범위에는

7) 박서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Lecturer)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 프랑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단, 프랑스에서는 형법에 의거하여 만 15세 이하 아동과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프랑스의 비동의 강간죄 관련 제도적 논의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2024년 5월 프랑스에서는 정치, 언론, 정치, 문학, 연예계 등 140명이 넘는 인사들이 프랑스 정부의 포괄적인 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 및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입장문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미투(#MeToo) 운동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실패했고, 사회적으로 성차별주의 및 성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사법제도는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입장문에서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성폭력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고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만연하다면서, 2022년 성폭력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이 무려 94%에 달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 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비동의 강간죄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재판에 세울 것, 그리고 보다 강력한 처벌 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전문 수사 인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 프랑스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르 몽드(Le Monde)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법부의 통계상 성폭력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7년 960여건에서 2022년 1,260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성폭력으로 실제 기소되는 경우는 아직도 적은 편인데, 그 이유 중 하나로 법적 조항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조항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3월 8일, 임신중지에 관한 자유를 헌법에 포함하는 헌법 개정 관련 행사에서 이를 언급했다. 이후 여러 국내의 언론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이 유럽연합법상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정의하는 조항에 공식적으로 반대한 회원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 2024년 2월 1일, 프랑스 상원 내 여성권익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었다. 본 청문회에서 에릭 듀퐁-모레티(Éric Dupond-Moretti) 사법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은 유럽연합의 젠더기반폭력 관련 법 내 성폭력 조항에서 합의 여부를 포함하는 데 프랑스 정부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비동의 강간죄 조항에 반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권한(competence) 범위와 행사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내린 입장이며, 일각에서 프랑스가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이 성폭력 문제에 있어 법적으로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 반면 듀퐁-모레티 장관은 제도적 틀에서 합의 여부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형사법의 법적 역할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합의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폭력 관련 법 조항에 합의 여부를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 성관계를 지나치게 계약관계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위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러한 듀퐁-모레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세린 앙투완(Jocelyne Antoine) 상원의원은 합의 여부를 조항에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반박했다.

- 이 밖에도 프랑스에서 선출된 유럽의회 나탈리 콜랑-우스텔리(Nathalie Colin-Oesterlé) 의원은 “합의가 없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위해 2년여 간 내부적으로 고군분투해 왔다. 현 프랑스 정부는 형법에 합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알고 보면 피해자를 그런 논리를 펼치는 수단 정도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멜라니 포겔(Mélanie Vogel) 상원의원은 유럽연합의 법안 통과에 반대한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정반대의 발언을 했으며, 이는 냉소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위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프랑스 정부가 시민사회의 포괄적 성폭력 방지법 제정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형법에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프랑스 정부가 어떤 행보를 취할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Euractiv (2024.03.14.), “France’s Macron faces backlash over U-turn on legal definition of rape”, <https://www.euractiv.com/section/health-consumers/news/frances-macron-faces-backlash-over-u-turn-on-legal-definition-of-rape/> (접속일: 2024.05.20.)
- Euractiv (2024.02.01.), “Minister of Justice clarifies France’s position over rape inclusion in EU directive”, <https://www.euractiv.com/section/justice-home-affairs/news/minister-of-justice-clarifies-frances-position-over-rape-inclusion-in-eu-directive/> (접속일: 2024.05.20.)
- The Guardian (2024.05.14.), “Impunity is growing: French celebrities call for law to crack down on sexism and sexual violence”, <https://theguardian.com/world/article/2024/may/14/french-celebrities-law-crackdown-sexism-sexual-violence> (접속일: 2024.05.20.)
- Le Monde (2024.03.14.), “Macron promises to add ‘consent’ to France’s rape law”,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4/macron-promises-to-add-consent-to-france-s-rape-law\\_6617206\\_7.html](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4/macron-promises-to-add-consent-to-france-s-rape-law_6617206_7.html) (접속일: 2024.05.20.)
- Le Monde (2024.03.19.), “The debate over adding consent to France’s legal definition of rape”,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9/the-debate-over-adding-consent-to-france-s-legal-definition-of-rape\\_6632673\\_7.html](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4/03/19/the-debate-over-adding-consent-to-france-s-legal-definition-of-rape_6632673_7.html) (접속일: 2024.05.20.)

## 영국, 학교 체육활동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도입<sup>8)</sup>

-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2023년 3월 “학교 체육활동에서의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in School Sport)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주로 학교 내 체육활동에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8) 임다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정책으로, 영국축구협회에서 축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여성 청소년의 축구 참여율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LetGirlsPlay 캠페인이 성공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 유럽 여성축구 대회에서 영국이 첫 우승을 거두면서, 해당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세계 여성의 날에 리시 수낙 총리(Prime Minister Rishi Sunak)가, 영국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과 동등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2024년 3월에는 해당 정책의 개정안이 소개되는 등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학교 체육활동에서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in School Sport)” 정책 개요

- 영국에서 아동 비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영국의 최고의료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는 청소년들에게 하루에 최소 60분의 활발한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비만계획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루에 최소 30분 신체활동을 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기 좋은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성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영국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약 6억 파운드(한화 약 1조 384억 원)를 2년간 전국 학교에 지원한다. 해당 정책은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며, 체육 수업 개발, 지도자 인력 양성, 학교 체육활동 범위 확대를 위한 예산, 필수 수준 안전 수업인 수영 수업 수료 대상 중 추가 수업이 필요한 학생 대상 수업료 지원 등 체육활동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사안의 핵심은 청소년 신체활동 증가와 더불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 청소년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남성 청소년과 동일한 참여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다.

#### ■ 2024년 정책의 주요 강화/개정 사안

- 영국 정부는 해당 정책이 도입된 지 1년 후인 2024년 3월에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과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육시간을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진행할 것을 권하는 등 개괄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여성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체육 수업시간에 여성 청소년이 참여하기 편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성 선생님이 하거나, 여성 청소년이 서로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이들이 편안하게 체육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둘째,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지도자를 교육할 때, 여성과 남성 청소년 모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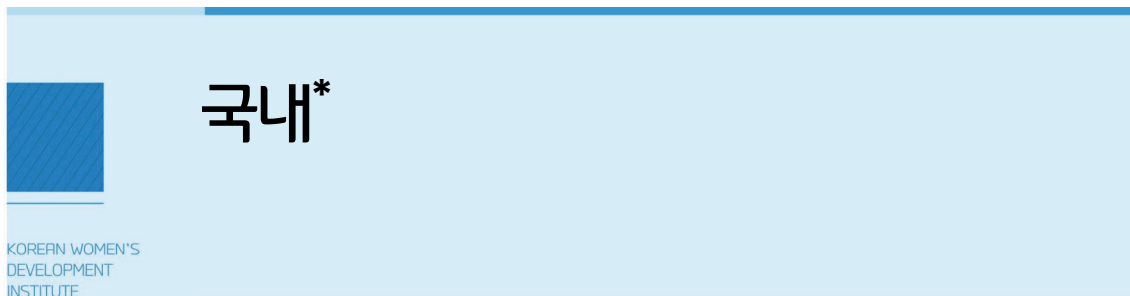
참여시키는 관점에 대해 강조할 것을 권고한다. 교사와 지도자가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일부 체육활동에서 배제하고, 남성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지도자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해 강조할 것을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롤모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여성 체육선생님의 채용을 늘릴 것을 독려한다.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개정안에서, 2022년 여성 유로컵에서 영국 여성 축구팀이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축구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교실 내에서도 여성 체육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체육인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여성 운동회나 여성 운동선수 초청강연과 같이 여성 청소년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교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이 앞으로 여성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고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GOV UK (2024.03.23.), "New PE guidance for schools strengthens equal access to sport",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pe-guidance-for-schools-strengthens-equal-access-to-sport>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4.03.25.), "How we are ensuring boys and girls have the same opportunities for school sport", <https://educationhub.blog.gov.uk/2024/03/25/how-ensuring-boys-girls-have-same-opportunities-school-sport/>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3.03.08.), "School sports given huge boost to level the playing field for next generation of Lioness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school-sports-given-huge-boost-to-level-the-playing-field-for-next-generation-of-lionesses> (접속일: 2024.05.18.)
- GOV UK (2023.10.06.), "PE and sport premium for primary schools", <https://www.gov.uk/guidance/pe-and-sport-premium-for-primary-schools> (접속일: 2024.05.19.)
- HM Government (2023.07.), "School Sport and Activity Action Pla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b7c813ef5371000d7aee6c/School\\_Sport\\_and\\_Activity\\_Action\\_Plan.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4b7c813ef5371000d7aee6c/School_Sport_and_Activity_Action_Plan.pdf) (접속일: 2024.05.19.)



## [여성가족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안에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이 단축되는 ‘기관장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하였으며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3.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FB1WRyQlqUU7UKLTGP4tFsho.mogef11?mid=news405&bbtSn=709871](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FB1WRyQlqUU7UKLTGP4tFsho.mogef11?mid=news405&bbtSn=709871)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부터 사업 수행 기관 확대
- 무료법률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단법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5개소로 각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 안내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3.2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76](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76)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 여성가족부,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3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는 피해자 총 8,983명(2022년 7,979명 대비 12.6% 증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서비스 등 총 275,520건(2022년 234,560건 대비 17.5% 증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02]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881](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881)

###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 실시

-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에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 2024년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가족센터와 직업교육훈련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등)이 함께 기획·운영하며, 언어, 직장문화 이해 등의 기초교육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 지원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09]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891](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891)

### 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12,0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1인 가구와 1세대 가구는 증가하고, 2세대 가구는 감소하여, 전체 세대 구성비는 부부+자녀 등 2세대 가구 39.6%(2020년 43.2%), 1인 가구 33.6%(2020년 30.4%), 부부 등 1세대 가구 25.1%(2020년 22.8%) 순으로 나타남.
- 자녀계획은 30세 미만 15.7%(2020년 대비 6.8%p ↑), 30대 27.6%(2020년 대비 9.4%p ↑)로 '있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으나, 30세 미만 65.3%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내 삶에서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은 40대(20.5%), 30대(1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04](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04)

##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결정

- 여성가족부는 제34차 및 제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합계 268명) 결정
  -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78명, 운전면허 정지 79명, 명단공개 11명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1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06](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06)

##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지원 현황 발표

-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2023년 폭력피해 상담 지원 현황 발표
  - 2023년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결과, 2023년 한 해 총 상담 건수는 294,328건으로, 하루 평균 약 806건 상담 진행
  - 총 상담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480건 증가했고,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스토킹에 의한 피해상담은 총 9,017건으로 2021년 (2,710건) 이후 최근 3년간 2.3배 급증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2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3](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3)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발표

-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 발표
  -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2,913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으로,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총 3,736명
  -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1.9%),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8%), 성매수(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24]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8](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8)

## 여성가족부,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확정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가정폭력’ 피해



자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총 13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피해자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확정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4.2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9](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19)

###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첫 개최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법인화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 및 설립준비반을 구성하고 제1차 설립위원회 회의 개최
- 설립위원회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고자 구성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35](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35)

### 여성가족부, '정부24'와 연계해 가족지원서비스 안내

- 여성가족부는 '정부24(행정안전부)'와 연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힘.
- 여성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민비서(행정안전부)'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여성가족부)'을 연계한 데 이어, '정부24'에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안내 강화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03]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36](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36)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따라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개최
-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6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
- 정부 대표단은 수석대표 모두 발언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고용 유지를 위해

양성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 제정,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 수립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설명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1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52](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52)

### 여성가족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는 60여 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내 다양성 및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역량 교육 실시
-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조직·인사제도에 ESG·DEI 경영 전략을 적용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직접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및 포용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세부 업무별 ESG·DEI 가치 적용 전략을 토의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58](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958)

### 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통계' 발표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청소년들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청소년 통계」를 작성
- 2023년 다문화 학생은 전체 학생(521만 8천 명)의 3.5%인 18만 1천 178명으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96.7%가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긍정 응답률은 2022년 대비 0.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28]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ueSDy-BVWA0HB3IIH1Morc5ub.mogef11?mid=news405&bbsSn=709973](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ueSDy-BVWA0HB3IIH1Morc5ub.mogef11?mid=news405&bbsSn=709973)

### 여성가족부,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 서면 심의 및 보고

- 여성가족부는 제17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4기 국가

행동계획(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안)»,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결과»,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3년 이행점검 결과」를 서면 심의 및 보고했다고 밝힘.

- 제4기 국가행동계획(2024-2027)은 예방과 참여 등 5개 분야, 11개 목표, 21개 세부과제, 45개 실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총 11개 기관이 이행에 참여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 2024년 시행계획(안)」에서는 현행 3일인 난임치료 휴가를 6일로 확대하는 등 132개 세부과제 추진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는 65.7점으로 2021년(65.5점) 대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교육, 건강, 양성평등의식 등이 높은 반면, 돌봄(31.4점)과 의사결정(30.7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6.0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ueSDy-BWAOHB3IIH1Morc5ub.mogef11?mid=news405&bbsSn=709978](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sessionId=ueSDy-BWAOHB3IIH1Morc5ub.mogef11?mid=news405&bbsSn=709978)

##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토록 개정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3.19]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0691&tag=&nPage=3](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1480691&tag=&nPage=3)

## [교육부]

### 교육부,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 담당자 대상 제1회 성장훈련 개최

- 교육부는 대학 성희롱·성폭력 업무담당자의 사안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성장훈련 실시

- 성장훈련은 지역별 대학의 고참 경력자(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대학 담당자 간 사안 처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여 상호 역량을 제고하는 교육방식으로, 전국 420여 개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총 3회에 걸쳐 실시

#### • 참고문헌 •

[교육부 보도자료, 2024.04.11]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62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s=moe&m=020402&opType=N>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복무·수당·승진 등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하는 등 임신·출산·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

#### • 참고문헌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4.05.17]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885&category=&pageIndex=](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885&category=&pageIndex=)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하여 본격 운영
-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정책 평가와 심층평가 등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고도의 전문 분석·평가 업무 지원 예정

#### •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4.04.26]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29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